

사회적 경제허브를 위한 교육시설 공간재생

Spatial Regeneration of Closed Schools for Social Economy Hubs



홍재우 /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ong, Jae-Woo / Associate Professor, Inje University
 politika@inje.ac.kr

1.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교육 공간

부존자원의 부족과 높은 인구밀도는 오랫동안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단골 과제처럼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 그리고 그에 따라 예측되는 인구감소는 고령화와 함께 대단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03년 이후 합계 출산율(1)은 최저 1.076명에서 최대 1.297명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출생아 수도 2013년과 2014년에는 43만 명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사회전반의 변화는 물론 교육제도 전반의 내용, 형식,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그림 1.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출처: 통계청. [2014년 출생통계]

출산율 저하는 당연히 학령인구²⁾의 감소로 이어진다.

1) 합계출산율(TRF, 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별 출산율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불과 5년 동안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는 매우 분명하다. 초등학교 인구의 경우 327만 6천여 명에서 273만 6천명으로 54만 명이나 감소했다. 약 16.5%가 줄어든 것이다. 이후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다. 과거 5년보다는 감소추세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2020년에는 고등학교 47만 6천여 명, 중학교 20만 4천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현재 총 752만 4천여 명의 총 학령인구는 2030년에 663만 3천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89만 1천명, 약 12%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림 2. 학령인구 변동 추계
 출처: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

이런 학령인구 변화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시설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단순하게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유휴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1

2) 학령인구는 교육인구를 가늠할 수 있는 1차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 만3-5세, 초등학교 만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면 1교 정책이 시행된 1982년 이후 2015년 6월까지 폐교된 학교는 전국에 3,627개소에 이른다. 이중 매각된 곳이 2,276개소이며 현재 다양한 사회문화 시설로 활용되는 곳이 945개소, 그리고 아직 활용되지 않는 폐교 406개소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당시 초등학교 수는 5,267개, 중학교는 2,731개, 고등학교는 1,957개였는데, 2015년에는 초등학교 5,978개, 중학교 3,204개, 고등학교 2,344개로 오히려 학교의 수는 증가했다.

이런 수급 불균형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학급당 인원수를 OECD 평균에 근접시키기 위해 학교를 더 개교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최재필 외, 2010, 5). 또한 농어촌과 도심지역의 학교가 폐교되거나 소규모 학교로 전환되어 이웃학교와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교가 그대로 남아 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도심의 경우 학생 수 200명, 읍면지역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재 2044개 학교가 기준 미달임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학교가 갖는 지역사회의 상징적 위상 (조정민 외 2014) 그리고 지역민과 졸업생들의 반발 때문이다.³⁾ 그럼에도 전체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학교가 많이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복합적 수급불균형은 폐교 뿐 아니라 유휴교실의 확대로도 연결된다. 교육청들이 잠재적 이용 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전국적 통계는 없다. 하지만 2007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관내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개 학교에서 123개의 교실이 비어 있었고 2008년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조사 결과 초등학교 중 경기도에서 643개, 인천에서 249개 교실이 비어 있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무려 1124개, 인천에서 190개의 교실이 비어있었다(최재필 외, 2010, 5~6). 이 수치는 이후에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학령인구의 감소추세가 폐교 등 유휴 미활용 교육 공간이 늘어나는 물리적 이유인 것은 맞지만 실제 폐교는 자연스러운 문체라기보다는 한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정치적 문제의 결과이며, 따라서 폐교의 재활용 방식도 이를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

2. 미이용 교육시설(폐교)의 활용 현황과 방향

3) 지역격차도 커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50.6%의 학교가 통폐합 기준 이하이고 전남이 47.2%, 전북이 45.7%, 경북이 45.1%로 뒤를 따랐다.

현재 유휴교실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이용방안이 없는데 비해 폐교 활용방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폐교 활용은 크게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지역소득증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런 시설들은 자연학습장부터 도서관,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주말농장, 농수산물 가공 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1. 폐교 재활용 분야

교육용 시설	자연학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직업지원시설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연전시시설 문화보급 및 문화전수시설
공공체육시설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행복을 위한 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농수산물 가공/생산/저장/유통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장사업, 농어촌 민박사업

물론 매각된 경우에도 다양한 시설로 활용된다. 가장 특이한 사례는 2001년부터 지리산 자락인 남원의 폐교를 정당의 연수원으로 활용한 예이다.⁴⁾ 2015년 현재 폐교된 이후 매각이 완료된 2,276개를 제외하고 활용되고 있는 945개 교의 활용현황과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406개교의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정부가 임대 준 학교는 740개 교이고 그중 243개가 교육용 시설로 쓰이고 있다. 자체활용으로 분류되는, 즉 임대하지 않은 205개 교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⁵⁾ 이 표를 보면 기타 항목으로 사용되는 곳도 156개로 나와 있는데, 농작물 재배, 고시원, 건설현장 사무실, 개인작업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임대)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의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임대된다. 계약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9년, 대개는 3년이나 5년 정도의 기간이다.

폐교의 현황 중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지역별 현황이다. 폐교가 가장 많이 된 지역은 예상과 같이 전남과 경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도시 지역의 감

4) 2001년 두동공동체가 폐교를 구입하여 민주노동당에게 임대했고, 민주노동당은 이를 남원연수원으로 이용했다. 이후 당이 분당되자 지리산초록배움터로 변화하여 노동, 정치, 환경이 연계된 친환경 공동체 시설로 변화했으나 정치적 변화에 따른 회원수 감소 등으로 2014년 해산되었다.

5) 일부는 중고등학교, 교육청 연수원 등으로 전환하여 쓰이고 있으나 대부분 교육용 체험장이나 교육지원 기관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표 2. 폐교 활용 영역별 현황

분류		활용	활용계획
매각		2276	163
대부 (임대)	교육용 시설	243	111
	사회복지시설	55	
	문화시설	75	
	공공체육시설	12	
	지역소득증대시설	199	
	기타	156	
자체활용		205	34
보존관리			98
소계		3221	406
총계		3627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폐교현황 2015.6.30.]

표 3. 폐교 활용 지역별 현황(2015. 6)

	폐교	기매각	기활용	매각예정	활용예정
서울	1	1	0	0	0
부산	30	10	15	4	1
대구	28	12	15	1	0
인천	54	34	11	8	1
광주	14	7	6	0	1
대전	8	4	3	0	1
울산	22	9	10	2	1
세종	13	12	1	0	0
경기	171	96	60	1	14
강원	438	201	196	28	13
충북	235	106	99	10	20
충남	253	189	36	23	5
전북	317	265	41	0	11
전남	797	597	64	55	81
경북	670	433	192	19	26
경남	544	296	170	12	66
제주	32	4	26	0	2
합계	3627	2276	945	163	243

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지만 서울을 제외하면 절대 수에서 적지 않은 학교들이 폐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심 공동화 현상의 결과이다. 대도시 도심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당 인원이 20명이 안 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0-50만 가량의 도시의 구도심에는 이미 폐교되었거나 폐교 위험에 놓인 학교들이 많다. 이들 도시 지역의 폐교들은 농어촌 도시의 폐교들과는 또 다른 활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학교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간주되어 매각이나 시효취득이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폐교 이후에는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매각, 양여, 교환, 사권 등을 설정할 수 있어 일반사유재산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1982년부터 상당수의 학교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각되거나 임대 되었다. 대다수의 폐교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와 제안은 이런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임대와 자체활용 부분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되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학교가 본래 갖고 있던 공공성을 상실하기도 한다. 사실 매각 이후의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학교의 폐교와 그 활용이 효용성을 강조한 단순한 경제적 가치의 차원에서 다뤄지거나 혹은 불가피한 교육행정의 효율성의 부산물로서 다뤄지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건축, 디자인, 사회학, 교육학 분야의 연구와 제안들은 폐교시설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 예술공동체의 레지던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교육기관, 아트센터 등은 이미 현실화 되어 있고, 일부는 폐교가 주로 농촌에 산재한다는 점에서 귀농·귀촌 시설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하고(박경택, 김정기, 2015),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시설로의 전환을 모색하기도 한다(최재필 외 2010).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개 학교 갖고 있던 지역 내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3. 공공성에 기반 한 폐교활용 방안

3.1 학교의 공공성과 사회적경제

학교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공간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일이 벌어지는 공회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징적 시설로 여겨져 왔다. 1950-1960년대 많은 학교들이 지역주민들의 학교부지 기부와 공역제공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사실은 “학교는 우리가 함께 소유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어떤 정신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하나의 공유지이다” (조정민, 신지은 2014, 131)라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 교육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당장 특정 학령인구가 부족해 폐교 되어도 학교 시설이 다른 교육 혹은 공공재로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주장은 꽤나 설득력이 있다. 외부인에게 임대하여 지역주민과 무관한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면, 심지어 그것이 전국에 산재한 여러 “체험 학습장” 형식으로 일정한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지역 공동체를 위해 복무하는 공공재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리기 쉽다. 따라서 학교가 갖는 “공공성”은 직접적 제도 교육이 시행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지켜야할 가치라 할 수 있다.

최근 “공공성”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자본주의의 끝없는 성장과 탐욕은 사회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했고 극도의 빈부 격차는 공동체의 성격을 정글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를 해결하며 사회적 공공성을 유지시켜야 할 국가는 복지와 재분배면에서 능력을 상실했다. 국가는 시장을 조정/통제 하던 역할을 잃고 오히려 시장의 위기마다 시장의 방어자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삶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다.

시장의 전횡, 국가의 무능, 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공성을 지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고, 역사적으로 자조, 협동, 연대에 뿌리를 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사회섹터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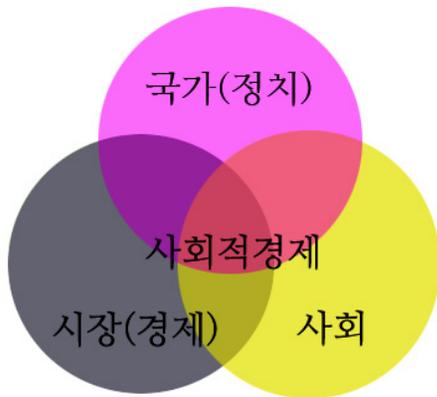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없다. 사회적경제의 확장성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단일한 개념 정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 활동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돈을 벌면서도 좋은 일(공공성)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때론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도 하다.⁶⁾ 국가나 시장과 거리를 유지하던 사회적경제에 대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수정해야하는 국가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가는 스스로의 역할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부분

6) 이런 개념적 차이에 따라 일반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Social Business와 마을 기업을 중심으로 한 Community Business가 나뉜다 (양세훈 2012).

으로 이양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런 정책적 개입에 있어 매우 급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서고 조금 더 나아가면 97년 외환위기 이후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수많은 사회적경제 활동 단체들이 생겨났다. 아직 사회적경제의 총규모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2014년에는 복잡하게 진행되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안이 잇달았고 2015년에는 여야를 포함해 모두 3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출되어 있다.⁷⁾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모두 협동과 연대를 통해 상생하는 공동체의 복원을 최종목표로 둔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금융지원, 정책 지원, 네트워크 조직, 행정지원 등 광범위한 국가 지원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투요될 것이다. 또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단체와 25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두고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부는 ‘마을만들기’ 혹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의 사회적경제적 여러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경우 교육, 여가, 수익활동의 거점이 되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가 가진 공공성이 폐교 이후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관점은 폐교 시설이 이런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지로서 유희학교 시설은 공적 성격을 잃지 않으며 지역의 공공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폐교의 활용에 있어 새로운 블루 오션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커뮤니티센터가 아니라 보다 지역사회에 보다 긍정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사회적경제 허브로서의 폐교활용 방안을 제시해 본다.

3.2 사회적경제 허브와 <대학 없는 캠퍼스타운>

기존의 폐교 활용 방안은 주로 교육과 문화생활에 치중했기 때문에 대개 이름 그 자체에서도 “체험관”과 “문화관/예술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많았다. 경제적 활동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개인이나 마을기업의 작업장, 저장창고에 그쳤다. 폐교를 지역재생과 관련한 공모전 등

7) 현재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의 법안이 각기 계류중이다.

에서도 폐교 활용은, 가구 단지가 가까우면 가구공방을, 봉제골목에는 봉제교육 공간으로 전환을 제안하는 등 주로 기존의 경제적 특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제안들에 머물렀다(이현희 2015). 따라서 판매자/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공간이 활용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사업의 대상 영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 규모도 작다보니 지역과 마을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폐교는 보다 확장된 개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생산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보다 확장된 가능성을 안고 지역사회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충격”을 주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IMPACT HUB 현황

출처: <http://www.impacthub.net>

바위의 중심축이라는 뜻의 허브(HUB)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원래 고유 명사였다.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사회혁신가들의 함께 일하는 공간 (co-working space) 이라는 개념으로 문을 열었다. 사회적으로 좀 더 좋은 과급력을 가져올 비즈니스,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실험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울리는 커뮤니티의 물리적 장소를 의미했다. 이후에 인근 유럽의 큰 도시들로 확장이 되다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소마(Soma)가 오픈하면서 대대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로 탈바꿈한다. 전 세계에 73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허브가 생긴 이후에 현재 일본을 포함해 3개의 허브가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유사한 기관과 구분하기 위해 <임팩트 허브>라는 명칭을 쓴다. 하지만 허브라는 이름은 이제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사회적경제의 여러 실험을 하는 공동작업장을 의미하는 보통명사화 되었다. 현재 서울에만도 서울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하는 서울혁신파크에 청년허브가 있으며 사단법인 시즈, 현대자동차, 서초구가 운영하는 서초창의허브 (schub.tistory.com), 서울시와 연세대학교 운영하는 하자허브(www.haja.net) 등이 있다.

이들 허브가 가지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대체로 청년 및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교육 뿐 아니라 공간, 네트워크,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혁신적 아이디어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다. 셋째, 일방향 교육이 진행되는 단순한 문화관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을 실험하는 사회적 혁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넷째, 주로 지자체와 협력하는 만큼 지역 청년 그리고 지역밀착형 사업과 관계가 있으며 청년이 모여서 만드는 결과가 지역사회에 다양한 파급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허브의 기초는 공동 이용의 물리적 공간이 제공된다는 데 있다.

이런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는 공간의 설치에 이를 통해 여러 젊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의 실험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한다. 이때 이들이 표방하는 사회적 공공성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는 것 이외에도 스스로 창업하여 고용을 창출한다는 사회적경제의 존재가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이런 허브들은 청년층에게 시장과 국가가 제공하지 못했던 전망을 스스로 찾게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사회적 허브들은 대개 대도시에 위치한다. 따라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난 폐교를 활용한다면 낙후된 구도심지역 등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폐교에 직접 도시형 사회적경제 허브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수익창출 구조가 불명확한 허브를 민간부분이 독자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대도시 지역에서도 위험성이 따른다.⁸⁾ 따라서 비도시지역의 청년허브를 폐교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과 연결된 “대학 없는 캠퍼스타운”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대도시 뿐 아니라 중소도시나 가까운 농촌 지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흔히 대학촌 혹은 캠퍼스 타운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과 기타 종사자들의 소비력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활동함으로써 생기는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효과는 전세계를 막론하고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학촌이라는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대학타운의 형성에 실패한 대학은 사실상 좋은 대학으로 성장하기 매우 어렵다.

<그림 5>는 폐교를 이용해 설치한 사회적경제 청년 허브가 “대학 없는 대학캠퍼스”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8) 허브서울에서 임팩트 허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던 허브앤컴파니는 운영사가 2015년 회사정산을 결정해 2015년 12월에 해산될 예정이며 이로써 아시아에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총 3개의 임팩트 허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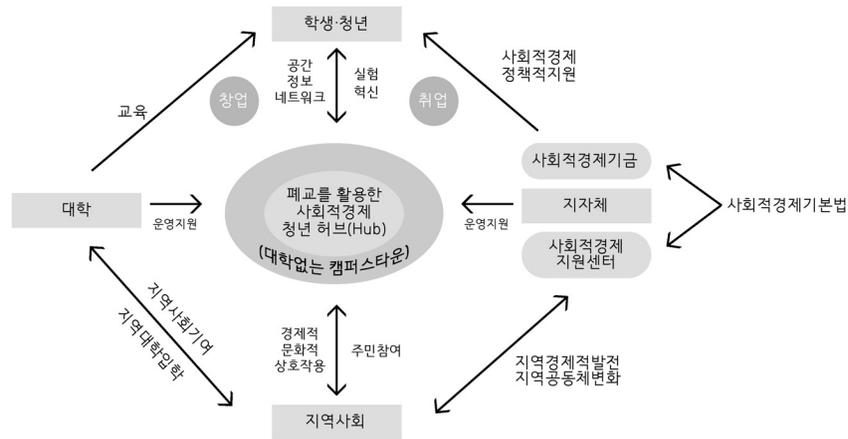


그림 5. “대학 없는 캠퍼스타운”으로 활용되는 폐교

주변지역이 대학 없는 캠퍼스타운(대학촌)으로 변화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청년 창업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에 발맞춰 대학은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을 교육한다. 최근 미래의 사회적 혁신가를 꿈꾸는 많은 청년들은 사회적경제가 각광 받으며 보다 많은 기회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대학과 인접해 있지 않아도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마을/도시가 폐교를 활용해 대학생 개인 혹은 청년 그룹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대학이 없어도 대학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허브로 캠퍼스 타운을 형성하는 중핵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복수의 대학이 공동으로 하나의 폐교를 사회적 혁신가 허브로 공동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은 학생들을 파견하고 청년허브의 실험 공간에서 자유롭게 기술개발, 창업,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은 지역공동체와 유리된 채 폐교를 숙박 시설처럼 운영하는 기존의 대학연수원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일정한 기간 동안 학생들이 상주(거주)하며 교육도 받고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머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면, 폐교의 사회적경제 허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문화적 경제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다. 학생들이 일상의 활동을 허브를 중심으로 한다면 주변 지역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이는 대학 없는 캠퍼스타운을 형성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활동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에 필요한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병행해야 한다. 또 지역공동체 자체가 청년허브가 만들어내는 많은 비즈니스 콘텐츠의 테스트 베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이후 설치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에 폐교 활용을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학교공간의 공공성 확장

전술한 바와 같이 학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사회적인구 집중 및 이동으로 인해 앞으로 폐교 등 미활용되는 교육 시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교가 가진 교육의 공공성은 폐교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현재까지의 폐교처리 정책도 일부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 내에서 학교가 과거에 가졌던 공공성을 확보 하는데는 충분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국가와 시장의 실패 속에서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동의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적경제 섹션은 다양한 공공성의 측면에서 지역공동체를 살리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제도적 교육기능이 끝난 폐교는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사회적 혁신 활동을 돕는데 좋은 물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제시되는 ‘대학 없는 캠퍼스타운’의 모형은 지역공동체로 하여금 경제적 활력을 얻고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로 재탄생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정택, 김정기. 2015. “폐교시설의 활용을 통한 귀농, 귀촌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1호. 135-138.

2. 백지숙, 강동희, 이용규. 2012. “농촌 폐교시설의 문화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제 32권 제2호. 75-76.
3. 이화룡, 류춘근, 오세희, 박소영. 2012.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합초등학교의 공간구성 및 폐교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21-31.
5. 이현희. 2015. “지역재생과 교육시설 연관 짓기.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2권 1호. 17-20.
4. 양세훈. 2012.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과주: 한국학술정보).
5. 조정민, 신지은. 2014. “지역공공성과 로컬리티-폐교문제를 통해서 본 공공성 개념의 확장 가능성과 그 방향” 『로컬리티 인문학』 11호 123-152.
6. 최재필, 이운재, 윤정원, 변나향, 문근중. 2010.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폐교시설 활용계획.”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6권 제3호, 3-11.